

화학물질 사고 예방 총괄대책 발표

정부, 6월 맞춤형 지원 대책 제시 ... 노후설비 점검·개선비용 도움

정부와 산업계가 최근 계속되는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에 나섰다.

환경부는 5월27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 장관들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 대표들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화학사고의 원인이 되는 노후설비 점검과 개선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에는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민간 전문기관의 방문 기술지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산업계가 부담 과다를 이유로 반발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하위법령을 만들 때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화학사고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는 선에서 관련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안전수칙 준수 등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솔선수범하겠다고 화답했다.

정부는 5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업 전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2013년 6월에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담은 총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5/27>